

노사정위에서 준비 중인 내용들이 입법화된다면, “노동시간단축”은 껍데기만 남고 저임금장시간노동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해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계약직고용 자유화, 파견제에 대한 규제철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일부적 적용 등의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다.

- 한 마디로 김대중정권의 노동법 개정방향은 1998년의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 강요에 이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변형근로제 확대,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의 폭력성을 은폐하면서 노동대중의 투쟁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기만적인 ‘노사정합의’를 강요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이에 노동법 개악 저지 전선의 교두보로써 이 땅의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명분으로한 생리휴가제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삭제 등의 모성보호법 개악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 모성보호법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기존 노동관계법을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법개정안을 통상 모성보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법 개악의 국면에서 여성노동법만의 개혁의 국면일 수는 없다.

- 노동자들의 권리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절대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이제껏 노동법 개악의 시도때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맞바꾸는 식으로 논의대상으로 만들어왔고, 사회적 분담과 사회적 합의의 논리속에서 우리도 이만큼 양보했으니 너희도 이만큼 내놓으라는 식으로 투쟁의 전선을 교란시키고 운동진영내 현실논리가 팽배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논리는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조건의 차이를 통해 내부를 분할하려는 자본의 의도이며, 이러한 의도가 이제 모성보호법과 여성관련 근기법 개악이라는 교환카드로 제시되어 교란시키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흥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부 자본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온전히 쟁취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성권쟁취투쟁은 노동법의 전반적 개악에 맞서 싸우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놓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악없는 모성보호법 제정!

생리휴가폐지 반대! 모성보호법 제정!

여성 관련 근기법개악 저지하고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1) 이 용어는 여성의 포괄적인 노동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방향을 모성에만 국한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료2>

공 개 질 의 서

수신 : 한명숙 여성부장관 귀하

발신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중복지연대, 서울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의, 청년진보당 여성위원회,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 가나다순)

일시 : 2001년 6월 18일 (월)

제목 : 한명숙 장관의 '여성보호조항 전면삭제법안 대표발의 근거 및
6월통과 주장에 대한 질의의 권

1.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파견법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노동권의 확보를 위해 각각 활동해 온 정당, 단체, 노조, 학생단체입니다.

2. 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5일 출산휴가 90일연장과 함께 여성보호조항(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위험유해업무로부터의 보호)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자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성관련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1) 근로기준법에서 여성보호조항(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위험유해업무로부터의 보호)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 귀하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법률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장시간노동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생리불순은 물론 사산한 여성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야간노동과 장시간노동, 휴일노동을 허용하는 이번 개악안에 대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권 전반을 다루는 이번 법개정요구를 모성보호법으로 둔갑시켜 개악안은 은폐하고 모성보호 강화조항만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 12일과 16일 여성의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금지조항 삭제를 반대하고 여성보호조항삭제 없는 모성권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거리서명을 받아 이미 2,000여명의 남녀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지 않고 모성권이 강화되도록 개악저지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끝)

쟁점

'모성보호'의 허울 아래 진행되는 모성보호관련 노동법 개악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명분으로
로한 생리휴가제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삭제**

정부와 국회는 당장 6월 국회에서 결판을 보게 될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을 지난달 유예보다도 더욱 교묘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모성보호법 개정에는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명분으로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삭제 등이 골고루 반영되어 논의되고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삭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개정안으로 야간·휴일·시간외·유해·위험업무로부터의 여성보호조항의 전권 삭제는 내용으로하고 있고, 생리휴가 폐지를 노사정위로 넘겨 월차휴가의 합계 폐지하며 시간외가산수당등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삭감하는 등의 노동법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모성보호법을 전제로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정권**

모성보호법 개정은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에 맞서 싸우는 과정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의 노동법 개악은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사 투쟁의 전선을 교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벼두의 "복수노조금지 5년연장"에 이어 매달 열리는 국회때마다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6월의 모성보호관련 근

기법 개악에 이어 하반기 내내 근로기준법 개악·비정규직 확산 입법·기업변동시 고용과 노조배제를 위한 입법들이 준비되고 있다.

월차폐지, 주휴 무급화, 최장 1년까지 변형근로제 확대, 노동시간에 대한 적용예외 확대 등 현재 노사정위에서 준비 중인 내용들이 입법화된다면, "노동시간단축"은 껌대기만 남고 저임금장시간노동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해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계약직고용 자유화, 파견제에 대한 규제철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일부적

용 등의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 마디로 김대중정권의 노동법 개정방향은 1998년의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 강요에 이어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변형근로제 확대,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의 폭력성을 은폐하면서 노동대중의 투쟁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기만적인 '노사정합의'를 강요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법 개악 저지 전선의 교부보로써 이 땅의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명분으로한 생리휴가제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삭제 등의 모성보호법 개악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투쟁사업장

"여의도에 뼈를 묻겠다"

- 전국건설운송노조 늪은 노동자들의 한맺힌 외침

오늘도 여의도 공원은 새벽 5~6시부터 투쟁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맨땅에서 달랑 침낭하나에 몸을 의지해 밤을 지새운 용감한 투쟁조끼의 주인공들의 태반이 놀랍게도 4~50대 나이든 노동자입니다. 직접 지이먹는 요리솜씨가 보통을 넘어섭니다. 높은 밥을 팔팔 끓여 누룽지까지 해마시고 말끔하게 설거지를 해결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아침부터 투쟁일정으로 콧 빠 여진 노숙일성. 방송사 KBS앞 심

회, 노사정위 앞 집회, 그리고 레미콘 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투쟁 일정은 계속됩니다. "죽여! 잡아! 물어! 씨발! 개새끼야!"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500여명 해고, 50여명 부상, 1명 구속, 70여명 출두요구서로 화답하고 있는 연합회측에 맞선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한을 담은 구호가 여의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펜티바람에 구호가 적힌 쌀푸대를 뒤집어쓰고 행진을 합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조합 인정하라".....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후반 사측의 강제 불하에 의해 지입차주라는 이름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차주라는 이름은 유류비, 보험료, 타이어교체비용 등 차량의 각종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 뿐이었고, 출퇴근 시간, 휴일에도 작업 강요 등 모든 작업 지시는 사측 관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차량 도색조차 바꿀 수 없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으며, 휴일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한달을 뺄까 지게 일해야 손에 쥐는 돈 80만원이 전부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입차주라는 명에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자본가의 이윤표를 붙여놓고 4대보험, 퇴직금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9월 22일 디디어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았지만 8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일로 파업투쟁 56일째(유진지회 파업투쟁 106일째), 여의도 노숙투쟁 일주일째지만 사측은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회장 유재필)를 중심으로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KS 인증 사후심사권'과 '관수 물량의 배분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연합회의 교섭거부 압력 속에 파업 50일이 넘어가도 단 한차례의 교섭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레미콘 비리기 폭로되었음에도 백 많은 레미콘연합회 회장 유재필은 아직 끄떡도 않습니다.

28일에는 위원장님과 조합원 1인이 노숙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

다. 국회 앞에 돗자리 하나 깔고 스티로폼 두 장으로 바람막이를 합니다. 낮 햇빛은 너무나 뜨겁고, 밤바람이 아직은 센데, 천막하나 치지 못하고 단식단은 온몸으로 피약벌과 찬마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400대오가 여의도 곳곳에 자리를 펴고 눕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쉽지 않은 싸움임을 알지만 40,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노동자의 삶, 이제는 당당하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늙은 노동자들의 소망은 젊은 노동자들의 열기보다 더욱 굳건히 투쟁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50이 넘어서야 알게된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더러워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늙은 노동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기에 더 이상 버틸 것도 없기에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은 강고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 힘차게 인내합시다! 현재 여의도 공원 농성장에 가시면 50여대의 레미콘 차량과 400여대의 승용차 부대, 그리고 3개지부 1개지회 43개 분회의 400여 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의 모습을 언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료

전경련 사회본부 고용복지팀 발표(2001. 5.25.)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주요내용

1. 인력조정

1)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완화

○ 현행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판례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판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리해고시 노조에 대

한 통보 기한을 노동부 신고기한과 동일한 '30일전'으로 완화해야 함

- 현행법상 정리해고를 할 경우 60일전에 노조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말미암아, 신속한 구조조정을 저해

□ 해고보상제의 도입 검토

○ 추가적인 해고비용의 부담 없이 인력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리해고 법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희망·명예퇴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해고보상제를 활용하고 있음. 또한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비약적으로 확충되었음

○ 따라서 사용자가 일정수준의 금전보상을 전제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해고보상

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법원판결로 해고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완화

○ 기업 인수·합병시에는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현실적으로 자산매각조차도 고용승계를 요구함에 따라, 기업변동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시 소멸회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영업양도, 자산매각시는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하고, 특히 파산법상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파산관재인에 의한 기업변동(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 배제를 명문화 할 필요 있음

2) 근로자파견제 개선

□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의 원칙 자유화

○ 파견근로 대상업무에 대한 규제는 급격한 경기변동과 기업환경의 변화속도,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Positive 방식으로 규정된 현행 파견대상 업무를 원칙허용·예외제한의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려야 함

□ 사용제한 완화

○ 현행 1년(1년 연장)으로 되어있는 파견기간의 제한을 완화하고(2년 + 2년),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함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후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2년→3개월), 노조 동

의 있는 경우 즉시 허용해야 함

2. 임금

1) 성과보상 임금체계의 구축여건 정비

○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확신을 위해 현행 연공시열형 임금지급 체계를 근간으로 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함

-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문제를 명료화하되, 임금체계 개선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

○ 연봉제 도입시 일부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하향조정되더라도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노조(근로자 대표)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실질한 협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기준임금의 단일화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 된 임금규정을 간결하고 알기쉬운 임금체계(예컨대 표준임금)로 개편해야 할 것임

- 표준임금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만을 포함시키고 기업 수익이나 연장근로 등 변동적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변동급여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

3) 퇴직금제도의 개선

○ 국제적 기준과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부담률을 조정해야 할 것임

- 연금제도의 제정불안 해소와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를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분과 소득에 따라 추가적

으로 가입하는 소득비례 부문으로 이원화하고, 소득비례 부문은 일정수준 이상의 적격 민간연금을 가입한 자에 대해 적용을 제외(opt out 제도)

- 법정 퇴직금제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임의화 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일정부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4)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국제기준인 2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높은 할증률로 인해 초과근로와 휴일·휴가근무를 선호하는 유인을 제거해야 할 것임

3.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인력효율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2주(4주) 단위에서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수준인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함

2) 적용대상 근로자의 확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및 계량근로 근로자의 범위에 사무관리직, 전문직, 영업직, 연봉계약직 근로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휴일·휴가제도 개선

○ 휴일·휴가제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식보장이라는 근본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휴일·휴가를 임금으로 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휴일 유급규정 및 월차휴가제 폐지

-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 유급생리휴가제는 본인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

사회화와 노동

2001년 6월 13일(수)

92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동선ID: pssp(삼,선) / go pssp(삼세상) / 홈페이지: <http://pssp.jinbo.net>

모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차이에 기반한 평등, 차별에 대한 거부를 위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90년만의 가뭄에 논바닥이 짙적 갈라지며 타들어가고 있다. 가뭄이라는 천재(天災)가 논바닥을 갈라놓고 농민의 삶을 매마르게 한다면, 이 땅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 개악”이라는 인재(人災)가 얹힌데 덮친격으로 민중의 삶을 송두리채 찢어놓고 있다. 구조조정·정리해고의 가속화와 대우지동차, 캐리이, 한통계약직과 114, 효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살인적인 경찰폭력, 용역강제 구시대 폭력등 가뭄보다 더한 인재(人災)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노동법 개악은 ‘변형근로’와 ‘휴일무급화’를 통해 우리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고 있고, 노사정위내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의 강화, ‘구조조정 특별법’을 위시하여 구조조정의 제도적 완성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그리고 총체적인 ‘노동법 개악’의 맥락에서 모성보호법의 기만적인 처리가 놓여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기만적인 2년 유예 논란을 빚었던 모성보호법(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상에 존재하는 여성관련보호조항(여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노동·위험·유해업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생리휴가제 역시 월차휴가제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에서 도맡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외 가산수당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삭감하는 법안까지 동시에 처리될 예정이어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국회에서 통과될 모성보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이고 무엇을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모성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해 대안 법률로 제출되었다. 2000년 6월 29일에 한나라당 김성숙 의원의 대표 발안으로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설, 유급출산휴가 연장(60일→90일),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의 모성급여 분담이 제안되었다. 이후 2000년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에 의해 산전후 휴가 30일 연장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의 임금

지급, 유급유시산휴가, 임신부의 건강검진휴가,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조항, 가족 간호휴직제 등이 청원되었다. 3달 뒤인 2000년 11월25일 민주당은 한명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신여성보호조항, 출산휴가연장능의 내용과 함께 여성보호조항(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으며, 12월에는 자민련 소속 정우택의원에 의해 생리휴가 삭제(안)이 제출되었다.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모성보호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6월 국회상임위원회를 앞두고 신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완전 유린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의 개정안에 대해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참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고, 일부 여성노동자들의 ‘동등대우’에 걸림돌이 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로 동의해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경우, 당시의 합의가 민주노총의 뜻과는 다르게 처리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이번 6·12 연대파업과 ‘총력투쟁 4대 요구안’의 하나로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조항 개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단체와 다른 입장을 확정한 상황에서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에 대해 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

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야말로 전경련, 자민련, 민주당 정부의 기만적인 2년유예 논란속에서 정신을 잃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먹어버린 꼴이 아닌가.

모성보호법의 즉각적인 실시와 출산비용의 사회분담화는 마땅히 이루어야 할 우리운동의 당면과제이다. 노동현장에서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과의 차별과 가정에서의 임신, 출산, 육아 부담의 일방적 전단이 강요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성보호에 관한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철폐하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이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성보호법 2년유예냐? 즉각 실시냐?"라는 허구적인 쟁점에 가려져, 보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2년 유예라는 반쪽씨의 이면에는 '모성보호'와 '여성보호'가 마치 맞바꿀 수 있는 것인양 흥정대상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성운동단체들 사이에서는 '모성보호'와 '여성보호'가 구별되어서 논의되고 있다. '생리휴가'를 계기로 촉발된 이 논의에서는, 임신·출산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모성보호'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기타 사항들은 '여성보호'로, 그리고 자녀 양육의 권리는 '육아권'으로 구별·명명될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현재 전개 양상을 보면,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선후의 논리가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모성보호'만을 중심에 놓고 '여성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전 세계적으로 '모성보호'는 대두되고 '여성보호'는 후퇴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여성보호조항은 그 명칭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보호'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성원의 한주체가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여성 '인권'과 '여성노동권' 보장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시간·야간 및 휴일근로·위험유해 업무에의 여성보호는 남녀 동등대우요구와 상충되는 예외조항이 아니라 차이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과 노동권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성평등이란 차이에 기반한 평등이고, 차이가 차별을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성보호법 2년 유예사태, 그리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모성보호법 개정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노동비용 축소라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 흐름과 농일선상에 놓여있다. 보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모성보호법을 전제로 한 노동법 개악의 시도'에 다른 것이다. 특히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방향이 다름할 수 없는 여성노동의 총체적 권리로부터 '모성'을 분리하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데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상적으로만 보아도, 한가지씩 내어주고 더 많은 것들의 양보를 강요하며 전체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김대중정권의 기만적 작태가 현재의 모성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역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성보호에 국한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보편적 인권과 노동권의 문제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모성권 강화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온전히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며 여성보호조항의 후퇴없는 모성보호법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되지 않고, 차이에 기반한 평등을 쟁취하기위하여, **SO-LA**

자료읽기

2001년 5월 31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민중연대(준)은 정부종합대책이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이 아니며, 노동자·민중의 부담증대를 전제로 하는 등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확보와는 거리가 먼 반민중적 정책임을 지적·비판하였습니다.

정부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1. 본인부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의원급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현행 3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40.6%나 인상되었습니다.

의원급: 15,000원 이하 2,200원 --> 3,000원

약 국: 10,000원 이하 1,000원 --> 1,500원

3,200원 --> 4,500원

이로 인하여 외래이용 시 직접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연 4,229억 증가하였고, 보험료 인상 효과로 환산해보면 5.1%의 보험료가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2. 오히려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올 7월 MRI, 초음파, 치면열구전색등 예방서비스 보험급여

방침이 전면적으로 철회되었고, 치석 제거,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급여 인정 기준 강화를 통해 보험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마저 재정안정을 빌미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3. 결국 보험료만 크게 오를 뿐입니다.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년도 추가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결국 2002년 이후에 보험료 인상으로 누적 적지를 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대책에 의한 효과가 정부 발표대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도 2001년에만 총 1조6,971억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 적자액을 금융차입금으로 충당하고 5년에 걸쳐 보험료 인상을 통해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발생할 적자액까지 고려하면 2002년에는 30% 이상보험료가 인상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4. 영리성 민간보험마저 도입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재정안정 후 보충적 민간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인 건강보험의 확대를 통해 민중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포기하는 기만적인 행태이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시장의 이윤논리에 전가하는 동시에,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반민중적인 조치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종합대책에 따른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후퇴되고 본인부담과 보험료만 대폭 인상되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성 민간보험을 사회보장체계 안으로 제도화하여 보험회사의 배만 불러주겠다고 합

니다.

신문읽기

민노총, 12일 5만명 연대파업 돌입 (2001/06/11 중앙)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12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 1백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날 오전 관세장관회의 등에서 불법 연대파업을 위반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총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12일에는 ▶금속연맹소속 92개사업장 2만5천여명 ▶대한항공, 아시아나등 공공연맹 2만여명 ▶섬유연맹 4천8백여명 등 5만5천여명이 파업에돌입하고 13일 이후 보건 의료노조 소속 서울대병원 등 62개병원 2만5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언론연맹소속 신문사노조가 4시간 제작거부에 들어간다. 또 12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집회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파업노조원이 참여하는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뭄에 따른 농민들의 참담한 고통의 심정을 공감하지만 이번 파업은 교섭이 진행중인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노사문제를 악화시키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업중에도 단위사업장이나 연맹, 민노총 차원의 교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교섭이 타결되는 개별 사업장은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이날 기본급 및 수당인상안을 놓고 회사측과 교섭을 계속하는 한편 각각 총파업출정식을 가졌다.

뉴욕타임스 "주당 근로시간 한국인 세계 1위" (2001/06/11 경향)

한국의 평균 노동자 앞에서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 말라.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여론조사기관 로퍼 스타치 월드와이드는 미국을 포함, 전 세계 31개국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주당 노동시간조사결과 한국인은 평균 1주일당 55.1시간을 일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긴 시간 동안 일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주 발표한 로퍼 스타치의 통계자료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터키인은 주당 54.1시간을 노동을 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아르헨티나가 53.5시간, 대만이 53.4시간으로 각각 3-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경기둔화가 계속된 미국과 중국 노동자가 일에 투입하는 시간은 똑같아 42.4시간으로 세계 평균 44.6시간을 밑돌았다. 로퍼 스타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측 가장 적게 일하는 국민은 프랑스인으로 40.3시간에 불과했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40.5시간으로 기록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개인노동시간 추이에 대해 로퍼 스타치는 프랑스는 약 1년전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부양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종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도록 했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부, 퇴직금 '기업연금'으로 전환 추진 (2001/06/11 조선)

노동부는 10일 현행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정위원회에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IMF 직후 영세 업체나 부도 업체가 사내에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총당금을 불변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적립하지 못해,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시계가 늘어나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취약해졌다"면서 '기업연금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4월 말까지 퇴직금 채불액이 6327억원에 달하며, 회사가 무너졌을 때 퇴직금 우선 변제 보장기간도 97년 8월 이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정위 토의와 오는 11월 한국노동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연금제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효성 향의시위 확산 (2001/06/07 국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조원과 한총련 대학생 등 1200여명은 6일 오후 울산 시내 곳곳에서 효성 울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9일 대규모 영남노동자 대회를 울산에서 개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총파업 때까지 항의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7일과 8일 노식 집회, 9일에는 태화강 두지에서 민주노총 영남권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영남노동자구단대회를 열기로 해 공권력 투입 후유증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원과 학생들은 6일 오후 4시쯤 울산 달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왕복 8차로 도로를 완전히 잠거한 채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5시30분쯤 현대백화점 성남점 앞에 다시 모여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지도부 100여명은 이날 밤 북산성당에서 철야농성했다. 한편 공권력 투입 직후 높이 40m의 지내 고층탑에 올라간 효성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최만식씨(36) 등 7명은 이틀째 고공농성을 계속했다. 경찰은 6일 검거된 효성 노조 부위원장 조한수씨(40)와 민주노총 화석여맹 사무국장 국일선씨(32·여) 등 8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中-美, 中 WTO 가입 완전합의 (2001/06/11 한국경제)

중국과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위한 다자간 협상 이견을 모두 해소, 중국의 연내 WTO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9일 스팅성(석광생)대외무역협작부장의 말을 인용,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 문제에 관한 미해결사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스 부장은 "이번 합의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리는 제 16차 중국가입 작업반회의에서 중국 가입안 통과에 돌파구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농업보조금문제, 보험시장개방, 교역권 인정 등의 분야에서 양측이 절충에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의 살름 에르난데스 대변인도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다자간 협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중국측과 합의를 이뤘다고 확인했다. 그는 로버트 줄러 미국부역대표의 말을 인용, "이번 합의가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총회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힘을 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99년 11월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했으나 농업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논란을 벌여왔다. 중국은 마지막 남은 양자협상 대상국인 멕시코와의 협상, 유럽연합(EU)와의 다자간협상 이견조율 등을 거쳐 오는 28일 중국가입 작업반회의에 임하게 된다

(한국통신) 노사 '114분시' 합의 (2001/06/10 조선)

한국통신 노사가 114 안내 전화 및 요금채납 관리 사업부 분사에 전격 합의했다. 한통 노사는 9일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보수·고용 보장 등

분사조건 준수 ▲향후 인력 감축을 목적으로 한 분사 중단 ▲농성 참가자 징계 최소화 ▲한통 잔류 희망시원에 대한 교육·재배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114 안내 신설 법인으로 옮기는 직원들은 현재의 60~70% 수준 보수와 향후 3~5년간 고용이 보장되고, 1인당 신설 법인 주식 2000~3000주를 받는다. 채납관리 법인 직원은 70% 수준의 보수와 3년 이상의 고용을 보장받고, 주식 1000~1500주를 받는다. 한통은 이번 합의로 당초 계획대로 114 안내 전문회사와 요금채납 관리 회사를 분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해외 DR(주식예약증서) 발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통 이사회는 지난달 7일 114 안내 농의 분사를 전격 의결했으나, 노조는 "사측이 회사업무 분할·분사 때 노조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인 분사 발표를 했다"며 경기도 성남시 한통 본사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쫓겨나지 않으려면 날 밤새고 일 해?



정말 큰일났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 5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가 되레 여성 노동자의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를 허용하고, 임신부도 동의하면 야간 근로와 시간외 근로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 이래서 문제입니다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무한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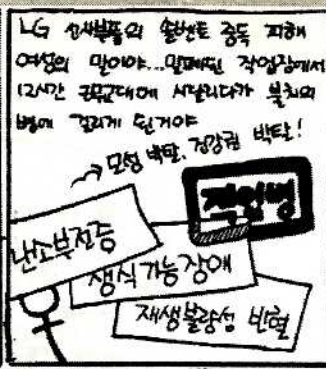
현행 근로기준법 제 68조와 69조는 여성과 18세 미만 청소년은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또 휴일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환경노동위 대안법률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일반 여성은 물론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도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불법 야간근로를 시킨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유해·위험한 사업장 문 활짝

현행 근로기준법 제 63조는 여성노동자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 대안법률은 이 규제 조항을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자,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좁혀 적용하고 여성노동자를 유해·위험한 업무를 완전히 노출시켜 여성노동자와 건강권과 나아가 모성보호까지 침해하고 있다.

갱내근로도 문 활짝

현행 근로기준법 제 70조는 여자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 대안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일시적으로 여성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사실상 여성노동자의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노동자의 갱내근로를 허용해선 안된다.



여성의 야간근로, 이래서 반대한다

농사짓는 부모 한 톨이라도 보태고 어린 동생 공부시키느라 공순이 소리 들어가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여성노동자의 젊음과 건강을 내맡겼던 70년대로 돌아갔나요.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달라지면 세상이 좋아져야 하는데... 내리막길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이고 생활이고 다 내팽개치고 날이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세계 7위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산업재해와 과로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여성노동자가 밤낮 가리지 않고 유해환경에서 일하면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볼 보듯 뻔합니다. 처음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취지를 살려 야간근로를 허용해선 결코 안됩니다.

가뜩이나 가사와 육아문제로 괴로운 기혼 여성노동자들 뺨골 빠지게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니꼽고 더러워도 참고 일했던 기혼 여성노동자들 화가 나는 애깁니다. 한 밤중에 일하면 가정살림과 아이들은 누가 맡아주기라도 한답니까. 잠 안자고 일하는 철의 여인 만들려다 애꿎은 여성노동자 다 죽입니다.

싼값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사용자만 좋아라 합니다

여성노동자 7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서러운 처지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나 시간외 근로, 그리고 유해환경에 아무 제한 없이 일시킬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규직 다 자르고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자 뺨속만 두둑해 질 것입니다.

국회환경노동위 대안법을 문제 많다- 여성노동자 근로기준법 개악안 즉각 철회! 모성보호 확대강화!

모성보호 하랬더니 날 밤 새고 일하라?

여성노동자는 임신하기가 두렵습니다.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갖은 아이를 위해 당연히 받는 정기검진을 사용자 눈치보며 죄 지은 사람 마냥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보수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니 가정살림 걱정에 시름만 늘어납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이런저런 걱정을 덜어줄 모성보호법이 경총과 정치권의 반대로 유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산전산후 휴가 90일로 확대 △육아휴직시 임금지급 보장 △유산·사산·태아검진 휴가 실시해 모성보호법을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비용부담을 핑계로 말짱을 다 빼먹고 개악안을 들이밀 일이 아닙니다.



1. < 한겨레 >

여성부 '모성보호법' 설득 잔결음

여성부가 '모성 보호법'의 6월 임시국회통과를 위한 막바지 정지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는 여성계의 압력이 만만치않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초당적 정책협력을 약속한 만큼 혼치않은 호기라는 판단에서다.

한명숙 장관은 최근 모성보호법에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여성계 대표들과의 물밑접촉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만 쳐다보느니 양측간 증재를 통해 한발짝씩 양보를 끌어냄으로써 국회통과를 위한 결정적 디딤돌을 놓겠다는 판단인 듯하다.

모성보호법의 뼈대는 출산휴가의 30일 확대, 유급 육아휴직, 태아검진을 위한월 1회 유급휴가 및 사산 유급휴가 신설 등 한 장관이 민주당 전국구 의원이던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장관을 포함한 여성부의 잔결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경총 회장단이 한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용부담을 들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렇거니와 여성계도 "국회 계류중인 원안에서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만 되뇌고 있는 탓이다.

여성부 일각에서도 "6월 통과를 위해 여성계가 일부 조항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정치공방에 영영물건너가고 말 것"이라는 조바심에서다.

특히 이미 민주당과 자민련 등 공동여당이 6월 통과를 공표하며 출산휴가 30일 확대에만 합의, 나머지 것들은 재계의 반대입장을 존중하기로 한 마당이어서 이같은 현실론이 세를 얻고 있는 분위기다.

여성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성계의 점증하는 압력을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6월 통과는 자신한다"며 "다만 아무래도 재계와 여성계 모두 약간의 양보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모성보호법 입법 300인 선언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13일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각계인사 300인 선언'을 받아 노동부, 여성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선언에는 이미경 가톨릭대학교 연수원장,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임동규 인의협 사무국장, 소설가 공지영씨,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등 종교계 55명, 학계 40명, 법조계 45명, 의료계 64명, 예술계 12명, 사회시민단체 인사 8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며, 당연히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고귀한 노동” 이라고 밝히고 △모성보호 확대 공약을 내걸었던 여야 정당은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사회분담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과시킬 것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생리휴가와 모성보호를 맞바꾸려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동부는 관련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희 기자minggu@hani.co.kr

모성보호법 통과 출산·육아 '사회화' 첫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거의 반세기 만에 바뀐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여성계 등으로부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절충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3개 법안의 개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관련 조항들은 1953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정됐다. 48년만에 법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근대화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얼마나 희생돼 왔는지를 상징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출산휴가 90일로 확대와 30일분 급여의 사회보험 지원', '육아휴직제 도입' 등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애초 초안을 발의했던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고용보험 지원은 노·사·정이 함께 모성보호 비용을 나누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성보호는 사회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4월 폐기된 초안에 들어 있던 유·사산 휴가, 유급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이 모두 삭제된 것은 재계를 의식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실 유·사산 휴가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으로 이미 노동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수준을 맞추자는 것이었다. 또 가족간호휴직제는 모성보호 이전에 일시적인 집안 사정으로 인한 고급인력의 퇴직을 막자는

취지이고 무급이어서 기업 부담도 없다.

더구나 재계와 자민련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생리휴가 폐지 또는 무급화'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이면 합의'에 대한 의혹마저 불러일으킨다.

여성·노동계는 정·경 담합으로 자칫 폐기될 뻔 했던 법안이 여론의 힘으로 되살아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생리휴가를 정치적 뒷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ccandori@hani.co.kr

여성계 “모성보호 첫걸음 환영”

모성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27일 여성계는 성명을 내어 “반세기 만에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 분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관련 법안들이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성명에서 “유·사산, 태아 건강검진 휴가 등이 유보되기는 했지만 연장되는 출산휴가 비용을 기업이 아닌 사회가 분담하게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농어민, 자영업 종사 여성과 주부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6개 여성·노동단체의 모임인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해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여야는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행정부처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근로조건 개선 없는 생리휴가 제도 수정에 반대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의 야간·휴일·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을 약화시킨 것은 변형근로시간제 등 불법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앤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박민희 기자minggu@hani.co.kr

모성보호법, 절반의 성취이지만

오랜 진통 끝에 모성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여성·노동단체들이 원래의 안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모성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성별, 나이, 고용인이나 사용자냐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다. '저 좋아서 아이를 낳는데 왜 국가가 보조를 하느냐'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바로 밭에 나가 일했다'는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출산과 육아를 극히 개인적이고 하찮은 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일부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 끝에 미흡하나마 출산과 육아가 남녀 모두의 일이며 모성보호가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그것 자체로도 성과라 할 것이다.

11월부터 시행될 모성보호법은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바꾸는 것이 뼈대다. 늘어난 비용을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대개 해 출산과 육아의 사회·국가적 책임분담을 실현했다. 그러나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은 사용률이 0.2%에 불과하다. 유급이라지만, 월 20만원 정도의 생계비 보조는 턱없이 작은 액수다. 선진국처럼 100%는 안 되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쟁점이었던 생리휴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유·사산 휴가, 태아검진 휴가가 빠진 것은 모성보호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특히 가족간호 휴직은 핵가족 시대에 남녀 누구나 당면한 문제인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제외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프랑스보다도 낮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동력 재생산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예고한다. 이에 대비하여 더 진전된 모성보호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는 코앞에 닥칠 일임이 분명하다.

모성보호 관련법 통과 의미와 내용

18일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의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향후 모성보호를 통한 직장가정의 양립은 물론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이 부담해온 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를 국가 재정과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충당함으로써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실현했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 휴가 조항이 빠지고 휴일·야간·연장근로 등 여성의 근로조건이 악화됐다는 일부 노동계 지적도 있다.

△출산휴가 연장 =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또한 산후 휴가를 최소 45일 사용하도록 했다.

휴가 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확대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한다.

오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법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 현재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썼지만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따라서 남성근로자도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기간중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월 20만-2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규정 조정 =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야간·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성희롱행위 처벌 강화 =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파견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파견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채용·승진·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 기존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신고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외에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남녀고용 평등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장내 성희롱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1-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사업장내의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자율개선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법에 정해

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 일률적으로 여성의 갱내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 취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근로기준법상 '여자'로 표기된 규정이 '여성'으로 바뀐다.

(서울/연합뉴스)

육아휴직급여 10만원 책정에 여성계 반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려는 것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여성계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모성보호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25만원 안팎으로 책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연대회의는 또 출산휴가가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면서 추가된 1개월분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상한액을 월 130만원으로 제한하려는 노동부 방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한액 책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지홍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대통령, 모성보호 3개법 서명

△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 서명식에서 여성계·노동계, 기업주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오전 여성계와 노동계, 기업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 서명식을 가졌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세기는 여성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모성 3법 개정) 가정과 사회 양쪽을 조화하는 동시에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올 수 있도록 (여성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모성 3법과 주5일 근무 등 노동자 권익이 향상될수록 생산성도 따라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배정에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수 기자 pcs@hani.co.kr

2. < 한겨레21 >

인정받는 모성, 아쉬움 쌓이네!

노동계 반발에 직면한 모성보호법 개정안... 출산·육아에 대한 미완의 사회적 대책

사진/ 여성계와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모성보호법 통과를 촉구해왔지만, 최근 여성노동권 개정과 관련해선 갈등을 빚고 있다.(박승화 기자)

‘모성보호법’이 지난 6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이 국회 발의 1년여 만에 드디어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수순만을 남겨놓게 됐다. 꾸준히 법개정을 요구해온 여성계는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며 즉각 환영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성계의 감격이 미처 잦아들기도 전에 한쪽에선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거센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모성보호법이 엄청난 추가부담을 불러올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온 재계만이 아니다. 이번엔 모성보호법의 한축을 이루는 노동계가 오히려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성계 환영 표시에도 노동계 저지 나서

그 중심엔 민주노총이 있다. 상임위 통과 나흘 만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사, 한나라당사 앞 등에서 민주노총 여성간부 6명이 모성보호법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가사와 육아, 특근과 야근, 연장근로를 형상화한 5개의 돌덩이를 목에 매단 채 너털너털해진 근로기준법 우산을 쓴 모습으로 3시간 남짓 항의시위를 벌였다.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안의 통과에 여성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껍이나 역설적이다. 모성보호법안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대한 내부균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모성보호 강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성보호법 개정안에 감춰진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조항 ‘개악’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세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성보호법이라고 뭉뚱그려 지칭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단일법안이 아니다. 정확히는 모성보호와 관련한 3개 법률의 개정안이 통합처리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중 모성보호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중 육아휴직조항 관련 개정안, 그리고 이

두 조항의 개정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일단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크게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한달 더 늘렸다. 또 현재 무급으로만 허용하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바꿨다.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지만, 그동안 받던 봉급 전체를 보상해주는 것을 것이며, 대략 한달 20만~25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추가재원은 고용보험과 국가재정에서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일부 여성노동 관련 조항도 동시에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여성노동자의 야근과 연장·휴일근로, 위험유해작업 및 갱내근로를 규제해온 근로기준법의 4개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대폭 완화·삭제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에게 야간근로 등을 시킬 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한 조항을 없애,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들이 사라지게 됐다”며 “되로 받고 말로 빼앗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여성노조도 성명을 내어 “이번 개정은 출산휴가 연장을 미끼로 한 노동법 개악이며,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개악의 출발”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연대회의 출범 때부터 모성보호법 개정활동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순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연대회의를 탈퇴했다. 민주노총의 한 여성간부는 “연대회의가 민주노총의 동의없이 소수의 권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전체 여성노동자의 중요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쪽은 당연히 달리 보고 있다. 김기선미 연대회의 정책부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조항들은 남녀평등과 일부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직무배치 등에서 여성노동자에 불이익을 주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안도 본인 동의를 얻고 연장근무 등을 시키게 돼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연대회의 안에서의 합의를 깨고 나간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성격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모성보호 확대비용 일부 정부지원

사진/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대접받을 것인가. 여성계는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모성보호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여성노동권 조항의 개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도, 모성보호조항 개정만을 떼놓고 보면 여성계와 노동계 모두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하는 데 이견이 없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본격 제기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한국의 모성보호 수준은 무척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어린이구하기’가 지난 5월8일 발표한 모성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22위에 그쳤다. 사회주의국가인 쿠바(11위)는 물론 칠레(17위), 체코(20위) 등보다 낮았다. 여성계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터키나 멕시코보다도 낮은 54%에 머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수많은 고학력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사장되는 현실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도 취약한 모성보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4명으로 프랑스보다 낮았다.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국장은 “사회성원의 온전한 재생산이 불가능한 ‘출산파업’ 수준의 낮은 출산율을 돌이키려면, 출산과 육아를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모성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견해를 상당부분 반영해,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재계는 그동안 출산휴가 연장과 육아휴직 유급화에 따른 기업 부담의 증가를 우려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모성보호 확대에 필요한 금액을 고용보험과 정부예산으로 감당하게 해 개별기업의 부담을 많이 덜었다.

물론 고용보험은 기업과 노동자가 절반씩 내는 보험료로 운영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렵다. 재계는 벌써부터 막대한 추가비용에 따른 고용보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유급 출산휴가가 한달 늘어나고, 유급 육아휴직을 대상자의 70%가 신청한다면 1조3천억원, 50%만 신청한다면 9614억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된다”며 “고용보험이 흔들리면 기업부담도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의 이런 계산은 너무 과장된 엄살이라는 반박을 받고 있다. 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추가부담은 대략 한해 1천억원 정도로 고정돼 있고, 육아휴직의 유급화 비용도 경총의 계산보다는 훨씬 적으리란 것이다. 경총은 육아휴직 대상자인 여성노동자 13만명과 남성노동자 23만명의 대부분이 최대 10.5개월인 육아휴가 기간을 완전히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 연대회의는 “유급화한다고 해도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은 미미할 것이고, 여성들의 육아휴직률도 20%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추가부담은 연 632억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도 유급 육아휴직 신청자가 처음 20%로 시작한 뒤 매년 10%씩 늘어나 2004년 2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계는 추가비용 타령... 모성보호 아직 멀었다

국제적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은 그다지 파격적인 것은 못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해 6월 출산휴가의 최저기준을 12주(84일)에서 14주(98일)로 늘렸다. 프랑스가 16주 출산휴가를 시행하는 등 출산휴가를 14주 이상 법제화한 나라는 이미 57개국에 이르고 있다. 북한도 지난 93년 제정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따라 15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선진국가 중 이에 못 미치는 나라는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 정도가 유일한 실정이다. 김기선미 연대회의 정책부장은 “미국은 연방법상 모성보호와 관련 유급휴가 규정이 없지만, 주에 따라선 소득의 60~70%를 보전해주는 유급휴가를 주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제도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이미 유급화가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12개월간 임금의 80%를 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정도가 무급제를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번의 개정안은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환기이긴 하지만, 모성보호의 충족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그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결정하는 것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시행령 확정을 둘러싼 여성계와 노동계, 재계, 정치권의 얹히고 설킨 각축일 것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3. < 하니리포터 >

모성보호법 새 전기 마련했나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30일분의 추가 비용을 사회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해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애초에 논의됐던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설안과 유·사산휴가 신설안,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야업휴일근로 금지, 시간외근로, 갭내근로 금지 등의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여성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생리휴가 폐지 또는 무급화를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도록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여성보호 조항이 더욱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서울여성노조, 파견철폐공대위,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등은 연세대 구공대 강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여성근로기준법 개악인가'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모성보호법의 문제점을 들춰냈다.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여성의 야업휴일근로, 시간외근로금지 조항 등이 여성에 대한 과보호조항이었다는 경총 등의 주장과 관련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지 않을 권리와 하루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휴일에 쉴 권리가 어떻게 과보호 조항인가"라고 묻고 "이 조항들의 삭제가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국제적인 추세에 따른다면 먼저 실질적인 근로시간단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법 개정은 여성에게 자유로이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데, 변형근로실시는 사실상 시간외노동제한이나 야업 및 휴일노동 제한 조항들을 무력화시킨다"면서 "야간, 휴일, 시간외근로 제한이 사문화되고 있다면 오히려 지켜지도록 강구해

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야간근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3조3교대제라면 5조3교대제로 바꿔 노동시간과 야간노동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삭제된 여성보호조항들이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은주 대학노조 여성위원장도 "여성의 71%가 5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이번 여성보호조항의 삭제는 이들에 대한 야간, 휴일, 연장근로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와 관련해 독일의 슈피겔紙에서도 교대근무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노동자보다 평균 수명이 15년이나 짧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사에서도 교대근무자들의 체중감소, 위염, 음주횟수 증가 등의 신체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 등은 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의 완화는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성은 고용에서 우선 해고되고 신규고용도 90%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을 볼 때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악영향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견철폐공대위의 김도형 변호사는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39.8%에 지나지 않아 실제 혜택의 폭이 상당히 협소할 것"이라며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여성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정도의 개선책을 가지고 '새로운 전기'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실질임금의 완전보장과 자녀 발생시 자녀간호휴가의 법제화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화합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 한두 가지 내주고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하는 기만인 작태가 이번 모성보호법 개정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고 평가했다.

하니리포터 황봄 기자 bohemian38@hotmail.com

4. < 중앙일보 >

재계, 모성보호법 개정안 반대

재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모성보호법 개정안' 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유급휴가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임신이 확인되면 유급 검진휴가를 매달 하루씩 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http://www.kef.or.kr>)는 '모성보호 법안' 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발효될 경우 기업이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이 8천5백억원 이상 늘어나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들과 함께 경총회관에서 법안제정 반대의견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재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경총은 출산 유급휴가를 90일로 늘리는 방안엔 찬성하나 모성 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원칙에 따라 출산휴가분의 급여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 포함된 월 1회 유급 태아검진휴가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성보호협약에도 규정이 없는 데다 적용 국가도 없어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태진 기자 <tjkim@joongang.co.kr>

[모성보호법안 외국은 어떤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가 추진하는 모성보호법안 내용 중 대부분이 외국에서도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아검진휴가와 사산·유산휴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는 내용이며, 시행 국가도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성보호 조항과 관련한 비용도 선진국들은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업주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총은 1백75개 ILO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를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사회보장체제가 미흡한 콩고, 우간다 등 20여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출산휴가의 경우 지난해 ILO 총회에서 종전의 12주를 14주로 늘렸으나 아직까지 37개국만이 도입했고, 그나마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아직 법률에 반영하는 기준을 하지 않고 있다. 재계도 휴가기간을 늘리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급 태아검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는 ILO 협약에도 규정돼 있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유급 생리휴가의 경우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일본.인도네시아만 무급 생리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김태진 기자 <tjkim@joongang.co.kr>

경총, 모성보호법안에 대한 여성계 주장 반박

경제단체가 추산한 모성보호법안의 기업 부담 추가비용이 과장됐다는 여성계의 주장에 대해 경영자총협회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경총은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됐을 때 기업들의 추가 부담을 산출할때 지난해 여성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5% 인상된 임금(91만2천2백91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데 반해 여성계.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을 그대로 사용,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했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재계.여성계 주장과 7천억원 정도 차이 나는 육아휴직 비용의 경우 경총은 유급휴가가 법제화됐을 때 신생아를 키울 남성근로자 23만여명이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최대치로 계산했다.

이에 비해 여성계는 육아휴직이 무급인 현 상황에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평균치인 20%(2만4천2백52명)만 대상으로 계산, 실제 부담규모를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김태진 기자

[취재 일기] 눈치보는 모성보호법

26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모성(母性)보호법 개정을 자민련이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공동 여당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미루고 있다." (李相洙 총무)

비슷한 시간에 열린 자민련 의원총회.

"자민련이 모성보호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우리는 찬성이다. 다만 경제계가 우려

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李完九 총무)

“물매를 자민련이 맞고 있다. 반대하려면 철저해야 한다. 여성계는 우리당을 재벌 돈이나 받는 고리타분한 정당이라고 욕하고 있다.” (李在善 의원)

모성보호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과 자민련의 혼란스런 모습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신계륜(申溪輪, 민주당 간사)의원은 “출산휴가 연장부분이라도 먼저 도입하는 등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여성, 노동계, 재계와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 혼선은 더해졌다.

지난 24일 모성보호법의 실시 시기를 2년 늦추겠다는 당론을 뒤짚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국회 기자실을 돌며 “申의원의 말은 ‘아직은’ 당론이 아니다. 정책위가 조만간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딱부러진 언급이 없어 혼란은 계속됐다.

한나라당의 태도도 어정쩡하긴 마찬가지다. 여당이 ‘유예’ 입장을 밝히자 뒤늦게 ‘즉각 실시’ 쪽으로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야당이 밀어붙였다간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고 말한다. 모성보호법의 즉각 시행을 주장하면서도 표결처리까지 강행하진 않겠다는 입장도 이런 발상에서 나왔다.

국민의 시각은 굽지 않다. 여야 정당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국회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환경노동위에 접수된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에 밀려 10개월째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씁쓸해 했다. 여론 눈치보기 속에 모성보호법의 4월 국회 처리는 이날 여야 합의로 무산됐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모성보호법 Q&A] 90일 휴가 다 쓸 수 있나 外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母性)보호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돼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전, 후 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여성은 '90일 산전, 후 휴가'의 혜택을 보게 됐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새 조항들은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11월 1일부터 30일이 더 늘어난 산전, 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30일분의 비용은 고용보험과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11월 초 출산 예정인 경우 10월부터 산전 휴가에 들어가도 90일 휴가를 다 쓸 수 있나.

A:안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10월 출산이더라도 10월 산전휴가는 안된다.

Q:직업이 교사 등 공무원인 경우에도 해당되나.

A:해당된다. 단,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정된 법을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Q:모든 근로여성이 적용대상인가.

A:아니다.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 5백30만7천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9.8%인 2백11만4천명이다. 따라서 지금의 현실로는 여성근로자 중 39.8%만이 확대된 산전·후 휴가의 혜택을 보게 된다.

Q:전업주부는 혜택을 볼 수 없나.

A:지금은 없다. 지난해 9월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에서 낸 입법 청원에는 '자영업·전업주부 등 사회적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전 여성이 모성보호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근로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내용이 다소 축소됐다. 그러나 여성계와 여성부는 앞으로 모성보호 점차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은주 기자 <julee@joongang.co.kr>

<모성보호법 주요 내용>

- ▶출산휴가 연장=산전·후 휴가 60일에서 90일로.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사용.
- ▶여성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제한규정 조정=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야간·휴일근무 가능. 단,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엄격히 제한.
- ▶육아 휴직=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의 일부(월 20만~25만원 예상)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성희롱 처벌강화=성희롱한 사업주에게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성희롱 행위자 징계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 ▶남녀고용 평등=퇴직 등에서의 남녀 차별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해고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거꾸로 가는 모성보호

모성보호법안 유예결정에 여성계 반발
여성인력 활용 국가 과제로 접근해야

모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보하기로 한 여당의 결정에 대해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는 25일 "모성보호 관련법의 2년 유예는 총선공약 파기, 여성의 건강권을 희생한 정치계와 경제계의 치졸한 졸작품"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다.

한편 연대회의는 모성보호법 시행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점, 발표한 모성보호관련 비용 통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모성보호법안 통과시 연간 최대 8500억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경제계의 주장에 대해 연대회의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연합 김기선미 정책부장은 "당정안에 따르면 60일의 출산휴가 비용은 현재와 같이 기업이 부담하고, 30일 추가비용은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의 경우 30일 추가부담비용 중 고용보험 비용에 대한 지급 부담이 있으나 실업급여는 기업과 노동자가 1:1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기업은 30일치 고용보험 비용 중에서 일반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면 된다"면서 경총이 출산휴가 급여 30일 추가분으로 529억5000만원을 추산한 것은 과도하게 추계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0억원은 이미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었고 고용보험에서 426억6300만원을 지급하면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213억320만원이며 연간으로 계산해도 426억640만원이라는 얘기다.

또 경총이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을 91만2291원으로 추정된 것은 2000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에서 드러난 87만원에 비해 높게 책정된 금액이라

는 것이 연대회의의 입장이다.

출산휴가급여 30일 추가분에 대해서도 “출산한 여성노동자 전부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경총의 추계방식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추정치” 라고 연대회의는 일축했다.

한편 유·사산휴가가 ILO협약에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대회의는 “ILO는 1952년 103호 모성보호협약은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 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같은 해 모성보호에 관한 원고를 채택하였는데 제96호에서는 유산 또는 산전산후 합병증 등의 경우 출산휴가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아울러 출산휴가 14주 연장을 대부분 선진국들이 아직 법률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성연대는 “노동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14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무려 57개국에 달하고 64개 국가가 출산휴가 기간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며 경총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강자 민우회 공동대표는 “모성보호 확대 및 사회부담화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라며 여성을 사회성원의 재생산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인순 여성노동자회 정책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여성의 모성보호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도리어 이에 역행하고 있다” 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모성보호법 2년 경과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계와 노동계 뿐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7월 시행을 위해 강경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모성보호관련법 쟁점... 여성부장관에게 듣는다

모성보호는 노사 모두 이득되는 윈-윈제도

최근 여성계의 최대 관심사인 모성보호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어 여성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에 대국민 홍보와 재계 및 국회의 원 면담 등 여성주무부처인 여성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으로부터 법률안 통과 전망 및 법안과 관련한 잘못된 인식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장관께서 국회의원 재직시 모성보호관련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한데 요즘 심정은 어떤지.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느냐는 식으로 모성보호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왜곡시킬 때에는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정책을 세울 때는 1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코 앞의 비용부담에 급급해 장기적인 이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성보호관련 법률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성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제도이다.”

-지난 번 여당에서 모성보호법안에 대해 일부 보류, 일부 시행이라는 논의가 나왔다. 여기에 여성부는 어떤 입장인지.

“여성부는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일부에서 태아건강검진휴가와 유사산 휴가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연기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이 제도들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관례상 또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이번에 법제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선 모성보호관련법이 여성에 대한 특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하는 여성들만 좋은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는데.

“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관련 법안은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남성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고, 전업주부를 둔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돌아간다. 또 여성 가운데 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성들에게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여성만이 아니라 일반여성에게도 간접적이거나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선언적 의미에 머물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최초로 실현함으로써 놓여민, 자영업, 가정주부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성보호 강화로 인해 기업이 여성고용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모성보호 강화에 따른 비용이 기업측에 일방적으로 부과된다면 이는 분명히 여성고용회피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성보호 법률의 입법취지는 모성보호 비용을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구정책 측면과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확대되면 여성고용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측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지닌 숙련근로자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성보호 강화에 따라 경제활동을 원하는 유능한 여성인력군이 넓어진다면 기업에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여성인력의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신청자들을 대체할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노동력의 공백이 생기는 걸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출산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어 대체노동력 확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기존 근로자의 휴가비용은 기존의 고용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기존 노동력 비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들지 않는다. 다만 숙련 또는 전문직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성부에서 숙련 근로자, 전문직 근로자의 대체인력풀을 만들 생각이다.”

-지난번 재계 인사들과 만나 모성보호관련법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 성과가 있었는지.

“지난 5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재계 관계자를 만나 모성보호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와의 만남은 여성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여성부 장관으로서 모성보호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재계관계자를 직접 만나 모성보호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당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본 것은 없지만, 국가경쟁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 모성보호제

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이견을 확인했지만 추후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가 고비로 보이는데 반대입장을 취하는 국회의원들, 특히 자민련에 대한 설득작업은 하고 있는지.

“자민련뿐만 아니라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에게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폭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고 있는 과정이므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연내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냐는 우려도 있다. 모성보호법의 연내 시행은 가능한가.

“모성보호관련 법률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준비해야 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정해야 하므로 조속한 시행에 부담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던 내용이고, 출산휴가의 경우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7월과 8월 두 달간의 임금은 기업주가 부담하고 9월에 대한 임금은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실제 재정지출의 원인은 9월 내지 10월에 발생하게 된다. 충분하지는 않다고 해도 열심히 준비한다면 조속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부에서도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적극 협조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사진 · 민원기 기자 minwk@womennews.co.kr

“생리휴가는 모성보호 기초” 양보할 수 없다
생리휴가 폐지 움직임에 여성노동계 강력 반발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생리휴가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노동관련법과 연계시켜 논의하기로 한데 대해 여성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 여성노동계가 모성보호관련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릴레이 시위에는 여성학자 오숙희씨를 비롯, 하유설 신부 등 종교인들도 동참했다.

사진·민원기 기자 minwk@womennews.co.kr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야간·휴일·연장근로 규제 완화 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어 “여성노동권에 전면적인 개악의도”라며 노동계가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모성보호 확대라는 미명하에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리휴가를 맞바꾸려는 정부의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의 기초”라며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생리휴가와 일부 출산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산전후 휴가 연장과 맞바꿀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모성보호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규제조항을 푸는 것은 여성노동자는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시대역행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또다시 제기된 생리휴가 폐지 움직임은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지난 달 여성고용관련법안 입법추진에 대해 “육아휴직,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확대는 ‘유급생리휴가’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체 휴일·휴가 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은 “생리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일본, 인도네시아 3개국이고, 이 가운데 유급 생리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우리 나라뿐”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고용평등, 동일임금, 모성보호, 가정과 직장의 양립조건, 직장 내 성희롱 등 다른 나라처럼 여성노동권을 보장받는 작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없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금지, 출산·육아휴직 확대 등 모성보호를 확대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모성의 사회분담화에 대한 방안을 확충한 후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김태홍 여성개발원 연구위원도 “생리휴가를 폐지했을 때 이를 보상해 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는 것은 생산직과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조건을 감안할 때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해 노동부가 마련한 예방의학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전문의들은 생리기간 중 여성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생리전증후군이 심한 여성도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우리 나라 여성노동자에게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힌다.

여성노동계는 정부와 재계의 생리휴가 폐지와 여성의 근로조건 개악 움직임에 대해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성연합 측은 “생리휴가제는 모성보호관련법과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국민 재생산,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모성보호법 6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성노동계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노동권 후퇴없는 모성보호법 개정 촉구한다”
관련법 6월 국회통과를 바라는 300인 선언

종교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예술계, 사회시민단체를 대표하는 300인이 지난 13일 모성보호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통과를 바라는 선언자 300인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며, 당연히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고귀한 노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이번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은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 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노동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할 기본과제를 뒤늦게나마 확인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될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언에 동참한 300인은 ▲ 모성보호 확대 공약을 내걸었던 여야 정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관련법 개정예 즉각 나설 것 ▲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와 사회분담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 ▲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생리휴가와 모성보호를 맞바꾸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 ▲ 노동부는 관련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의 철저한 준비로 관련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